

곧 주민투표...가동 재개 해도 광주 폐기물 반입 어려울 듯

양과동 매립장 증설 부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어떻게 돼가나

광주시가 남구 양과동 쓰레기 매립장 증설에 나선 것은 향후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양과동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크게 단축되고, 포화상태까지 우려됨에 따라 매립장 증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나주시민의 반발로 가동이 중단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가리기 위한 주민투표와 공론화 방식 등의 여론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 발전소 가동이 되더라도 광주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의 발전소 반입을 장담할 수 없어 광주시가 결국 양과동 매립장 증설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나주 SRF' 가동 중단으로 광주 '쓰레기 대란' 우려=광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 상무소각장 가동중지를 앞두고 그 대안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SRF 생산시설을 조성했다. 상무소각장에서 불태웠던 생활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해였다. 또 SRF 생산을 통해 양과동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30년~50년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급속한 도심화로 광주에서는 현재 양과동 이외의 쓰레기 매립장을 찾기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SRF 생산을 통해 양과동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리는 게 광주시로서는 최선의 쓰레기 대책이었다. 하지만, 발전소 준공 이후 시험가동 중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주지역 주민들이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고 나섰다.

법대위 등 지역주민들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반입에 반대한다"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현

전남도 주도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 주민투표·공론화 방식 여론조사 합의 특수목적법인 발전소 인수 등도 논의

재까지 발전소 가동을 중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유일한 광주시의 쓰레기 대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마트와 병원 등지에서 생산되는 가연성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현재 매립이 금지돼 있어 소각을 해야함에 따라 광주에서는 SRF 생산시설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나주 SRF' 주민투표와 공론화로 풀다=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설은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와 공공기관 및 건물 등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2017년 9월 준공됐다. 전남의 3개 권역인 목포·신안·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발전시설을 가동한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쓰레기 반입이 이뤄진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내세워 발전소 가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 때문에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지연방공사와 지역주민들 간 법적 소송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는 지난 1월 이해당사자와 공공기관,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 수 차례 협의를 거쳐 현재 주민투표와 공론화 방식을 접목한 여론조사를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공론화 방식을 반영한 주민투표 시행 방안을 논의한 결과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km 내 주민투표 방식에 공론화 방식을 접목하기로 했다. 반영률은 주



광주에서 생산한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 (SRF-Solid Refuse Fuel)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 중단으로 광주시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이 30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광주 가연성고형 폐기물 연료 시설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민투표 70%와 공론화 방식 30%로 잠정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반영률에 대해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이 SRF 발전소를 인수하는 방안과 조건에 대해 검증단의 발표가 있었지만, 차기 회의에서 지방에너지공사 설립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26일 6차 회의를 열고 환경영향조사 기간에 대한 각 기관의 조사 발표, 지방에너지공사 설립 방안, 속의형 공론화 방식에 대한 절차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 "죽산보 해체 논의 밀어붙이기 없다" 최종원 청장 간담회... "팽팽한 해체·존치 여론 두루 수렴하겠다"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18일 "죽산보 해체 논의에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 해체와 존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한 만큼 두루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일보 2월25일자 1,3면>

영산강환경청은 간담회에서 영산강 보 관리 방향을 핵심으로 내건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 달 제안한 죽산보 해체 방안을 두고 오는 6월까지 폭넓은 여론 수렴을 이어간다. 보 처리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 양수장을 전면 정비하고 지하수 공급 대책을 세운다. 황포돛대 선착장은 죽산보 하류 지점인 원래 자리로 옮기도록 예산 17억원을 확보했다. 기획위가 해체를 제안한 죽산보 처리방안은 물관리기법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출범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그러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광역자치단체, 시민단체, 사업장, 전문가, 환경공단이 참여하는 호남권 미세먼지 대책 협의회를 운영해 부문별 대안을 찾는다. 대기오염 기여도가 높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민간분야에서도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시도와 논의한다.

산업을 분야에서는 중소 사업장에 배출저감 장비를 빌려주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시·도 보건환경연

구원이 운영 중인 대기 측정망 41곳을 2022년까지 62곳으로 늘리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이동측정차를 도입해 올해 안으로 시·도에 1대씩 배치한다. 대규모 참사가 우려되는 여수·광양산단 화학사고의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독성가스 취급소 등 고위험 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안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연간 4차례 최고경영자(CEO) 교육을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화학 사고의 60%를 차지한 운반차 사고를 줄이고자 도로관리기관과 합동 방재훈련을 펼치고 예방 활동을 펼친다.

수질뿐만 아니라 수량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부터 통합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섬진강 하구 수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광주와 전남지역 식수원인 섬진강의 수량이 줄면서 바다와 만나는 하구에서는 15년 사이 재첩 생산량이 3분의 1로 주는 등 연해가 발생하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섬진강 하류 염해 문제를 규명하고 수생태계 복원과 대책을 마련한다.

만성 식수난을 겪는 섬 지역의 물그릇을 키우는 데 지난해(223억원)보다 세 배 이상 늘린 예산 723억원을 투입한다. 영광 안마도와 완도 보길도 등 6개 섬 해안 땅속에 차수벽을 쌓아 지하저류지를 설치하고, 해저·연륙교 상수도관로와 해수담수화 시설을 구축한다.

보호와 개발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장류습지를 둘러싼 갈등은 중재자로 나서 대안 도출에 힘을 보탠다.

최종원 청장은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자원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여러 사업을 환경청이 맡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연합뉴스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의혹 낱알이 규명돼야"

법무·행안 장관에 세 사건 보고 받아 "검찰·경찰 조직 명운 걸고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사건들에 검·경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알이 규명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수사를 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제청 등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뻑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지 못한다면 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다시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버닝썬 사건과 관련,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제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하나투어

하나팩

무안출발 상해로 떠나는 '골가가는 재미' 상해여행 더하기 하나 데!

무안출발 '상해+중국핵심도시' 연계여행

상해/항주/주자각

329,000원~

현지지도 가이드, 기사경비\$40~ 선택경비 있음

상해/장가계

1,199,000원~

현지지도 가이드, 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상해/계림

1,069,000원~

현지지도 가이드, 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상해/황산

649,000원~

현지지도 가이드, 기사경비\$40~ 선택경비 있음

상해/귀양

1,379,000원~

현지지도 가이드, 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무안공항 ↔ 상해푸둥공항】 매주 수요일(3박4일) 토요일(4박5일) 동방항공 운항
4월 3일부터 동방항공 기종이 A323 비즈니스 12석, 이코노미 164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해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지] 도착비지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됩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 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참조) ■ [특별이벤트] 특별이벤트 참여 시 상해에 따라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충무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초/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택시(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해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지체 *철수 권고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